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악’ 불명예 법안 처리율 36.9%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법률안 133건 포함 141건 의결
전체 2만4139건 중 9119건 통과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9%를 기록하면서다. 여야는 20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을 포함한 141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본회의에서의 의결한 법안은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한 과거사에 대해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기점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또는 기존 요금제 가격 인상 시 정부로부터 인가받도록 하는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는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이하 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생환 안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매년 생활 실태 및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21일 기준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2만4139건) 가운데 통과된 것은 9119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1만5020건에 달한다. 특히 제주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를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청원에서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계속 심사’ 결정을 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날 협약식에는 송실대의 황성성 총장(왼쪽에서 네번째), 최자영 창업지원단장, 고승원 대외협력실장, 이청재 창업교육지원팀장, 김지현 홍보팀장, 윤형훈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으며, 교보생명에서는 윤열현 대표이사, 권창기 전무, 문성진 전문위원, 백재경 부장이 배석했다. /송실대

송실대-교보생명, 스타트업 육성 산학협력

인프라·유망 스타트업 공유

송실대는 지난 19일 오후 송실대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교보생명과 중소기업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과 관련된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B2B2C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실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선도 대학으로서의 인프라 및 유망 스타트업

들을 공유하고, 공동 과제 및 프로그램을 선정해 교보생명과 진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스타트업과 협업하여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창업 관련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양 기관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부터 송실대와 교보생명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B2B 플랫폼 공동 개발 및 구축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현진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기말고사

시험 안 볼수 없어 vs 신뢰도·변별력 ↓

일부 대학 기말고사 대면시험 예고
학생들, 안전기준·의견수렴 요구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논란 불가피



온라인 강의 듣는 대학생 /뉴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을 이어오던 대학이 6월 초 시작되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방식과 관련 학생들 의견이 분분하다. 잠잠해지던 코로나19 감염 추세에 대면 수업을 재개했던 대학들이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 체계를 바꿨지만, 일부 대학에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키로 하면서 일부 학생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송실대,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들이 앞서 중간고사를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물로 대체하면서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갖춘 대면 시험으로 치르겠다고 예고했다.

경희대는 기말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치른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비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안전기준 준수와 학생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공지해 달라”면서 “이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코로나 지역 감염이(경희대가 위치한) 동대문구에서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송실대도 중간고사를 온라인 및 과제 제출로 대체하면서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고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난처하다. 송실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서울대와 인하대도 고민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대 한 교수는 “학칙상

기말고사만 필수로 명시하고 있어 중간고사는 없앨 재량이 있지만,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간고사에 이어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경우 공정성이나 변별력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치른 중간고사에서 대부분 대학이 ‘온라인’ 시험이나 과제 제출로 대체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학생이 ‘대리 시험’ ‘단체 시험’ 등 부정행위를 도모하며 논란을 빚었다. 시험 성적이나 오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져 이를 교내 장학금 산정 기준으로 삼거나 취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대는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넓은 강의실 확보를 위해 시험 기간을 3주로 연장했다. 중앙대 한 교수는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치르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라면서 “과목마다 시험 장소와 시간을 분산해 시행하면 학생들 간 접촉을 줄일 수 있어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nj@

‘교원노조법’ 국회 문턱 넘었지만... ‘반쪽짜리 법’ 논란

교수 노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
노조 자율선택 사항 법으로 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막상 교수들은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한다. ‘단체교섭권’ ‘퇴직 교원 가입 불허’ 등 노조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줄곧 요청해온 ‘근로시간 면제제도’도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교수 노조’ 무력화 문제를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 등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대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이 일부 내용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통과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뉴스시

을 가능하도록 했다.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장 등과 교섭할 수 있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수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방효원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위원장은 “개별학교 교수노조 설립 여부는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설립을 허용하면 법인의 이해관계를 대면하는 ‘어용노조’의 설립을 가능케 한다”고 우려했다.

교섭 창구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교섭 창구와 관련해서는 국가가(법으로)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명지대, 국방정보자원 ICT 전문인력 양성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업무협약

명지대가 ‘4차산업혁명 ICT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명지대에 따르면, 명지대 대학원과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는 20일 오전 DIDC 대회의실에서 MOU

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는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보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자원 교류,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및 학위과정 운영, 워크숍 또는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되며 지역산업 발전 조성 및 양 기관 상호 발전이 기대된다.

선정원 대학원장은 “명지대는 국방 및 정보보호 분야에 대학원 학과를 운영하고 고급 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필요한 ICT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인적 교류 및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